퇴진요구 몰린 박대통령 국민·야권 분노 무시 오기 인사

‘김병준 책임총리 카드’ 실효성 논란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총리제’ 카드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태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야권에서는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며 퇴진 운동에 나설 태세며 여당인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인사들도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박 대통령이 제시한 책임총리제가 제 역할을 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확실시된다.

청와대는 거국중립내각 취지의 ‘책임총리제’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야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은 오히려 커져 가고 있다. 책임총리제가 닻을 올리기도 전에 난파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사실상의 2선 후퇴를 요구한 야권·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하기보다는 단순한 ‘역할 배분’에 초점을 맞춘 책임총리제를 선택한 때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욱이 박 대통령이 야당은 물론 여당의 지도부와도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각을 발표, 정치권의 협조를 얻어 국정공백 사태를 수습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증폭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은 이날 청와대가 ‘박 대통령은 사실상 2선 후퇴하고 신임 총리가 내치를 전담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는 꼼수”라고 일축했다.

청와대 “사실상 2선 후퇴” 강변 불구
새누리 비박계까지 “일방 개각” 반발
野 인사청문회 거부 국회 인준 불투명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대통령이 실제 임명은 다 해놓고 이원집정부제인양 하는 꼼수”라며 “가장 중요한 진상조사에 대한 언급이 없이 내치·외치 분리 운운하며 일방적으로 개각을 단행한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정당한 권력을 행사할 자격을 갖춘 곳도, 국정붕괴의 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곳도 오직 국회”라며 “국회를 배제해서는 내치든 외치든 대통령의 어떠한 권한 행사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여권 잠룡인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도 “오늘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김병준 총리를 지명한 방식은 사태 수습에 도움이 되지 않고 거국중립내각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 같은 반발을 보면 청와대가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인준이 불투명해졌다. 당장 인사청문회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13명으로 구성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소집돼야 하는데, 야당이 거부하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는 방법밖에 없다.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표결을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총리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현재 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김 후보자 인선 전후도 매끄럽지 못했다. 김 후보자는 애초 이날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직 수락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3시 이후로 연기했다가 다시 2시30분으로 조정했다. 정작 시간이 돼 나타난 김 후보자는 현안에 관한 문제는 내일(3일) 발표하겠다고 입장발표를 또 다시 미뤘다.

김 후보자가 이런 행보를 하자 정치권에선 김 후보자가 세월호·국정교과서 문제 등에 대한 야권 요구를 청와대가 수용할 경우 총리직을 수락하기로 했는데, 청와대가 이에 대한 확답 없이 발표하는 바람에 심경에 변화를 일으킨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역 앞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거리 홍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2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비선 실세 의혹과 이날 내각 발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박 대통령 책임총리에 정치·사회·경제 권한 넘겨줄까

역할·권한 분담 논의 여부 관심

청와대가 2일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를 ‘책임총리’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넘겨 내치를 맡기겠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책임총리제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김 후보자는 이번 소폭 개각에서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로 추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책임총리의 역할과 권한 범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책임총리제는 국무총리에게 헌법에 보장된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적 용어가 아니라 정치적 용어다.

책임총리제의 개념은 헌법에 나와 있다. 헌법 87조 1항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총리의 권한 강화는 곧바로 대통령의 권한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역대 총리 가운데 김영삼 정부의 이회창 전 총리나 노무현 정부의 이해찬 전 총리 등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책임총리를 구현한 전례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최순실 파문’ 속에서 지명이 된 김병준 후보자가 국회 인준안을 통과해 총리로 임명된다면, 전과 다르게 책임총리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료 선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국정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중요한 것은 박 대통령의 권한 이양 의지다.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정치, 사회,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대통령의 정책 결정 권한을 책임 총리에게 이양해야 한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이날 인사 발표 전에 김 후보자와 국정 수습 방안에 대해 별도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국정운영에 대한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내정자는 3일 별도 회견을 갖고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신임 총리·경제부총리·안전처 장관 내정자 프로필

박근혜 정권 정책 곳곳 대립각 세운 ‘원조 친노’

김병준 총리

참여정부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브레인 역할을 했던 ‘원조 친노(친노무현)’로 통한다.

김 내정자를 상징하는 키워드는 ‘지방분권’이다. 국민대 교수 재직시절부터 한국 학계에서는 아직 낯설었던 지방분권을 설파하는 대표적 학자로 자리매김했다. 1993년 노 전 대통령이 설립한 지방자치실무연구소의 특강을 진행한 것을 계기로 둘의 오랜 인연이 시작됐다. 이듬해 노 전 대통령은 그를 연구소장으로 임명했다.

2002년 대선 때는 정책자문단의 단장을 맡아 정책캠프를 운영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충실히 구현하면서 일각에서는 ‘왕의 남자’,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대표적인 ‘김병준표’ 정책으로는 종합부동산제, 양극화 해소를 포함한 동반성장 전략, 고용지원서비스 확대 등이 꼽힌다.주위에서는 어린시절 가난한 가정환경에도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성공한 자수성가형 인물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개헌에 대해서도 꾸준히 지지 의견을 펴 온 것으로 알려져, 이후 개헌논의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부인 김은영(58)씨와 2녀.

▲경북 고령(62) ▲영남대 정치학과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노무현 후보 정책자문단장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 공공경영연구원 이사장

보성 출신…금융·거시경제 두루 능통한 경제통

임종룡 경제부총리

그간 경제부총리 유력 후보로 여러 차례 하마평에 올랐다가 한국경제호(號)가 대내외적으로 최고조의 위기에 놓인 시기에 키를 잡게 됐다.

재무부(MOF)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흔히 경제기획원(EPB) 출신은 거시정책에, 재무부 출신은 금융에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임 내정자는 금융과 거시정책에 두루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제기획원·재무부 때부터 명맥을 이어온 핵심 정책 부서를 모두 거친 흔치 않은 배경이 있어서다.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등 대형 경제위기 때마다 수습을 위한 대책 실무를 맡아 정부 내에서 구조조정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꼽힌다.

온화한 성품이며 합리적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가가 많다. 선후배 사이에서 그를 둘러싼 험담을 듣기 어려운 것은 이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선 ‘닮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 뽑혔다. 프로듀서(PD) 출신인 부인은 KBS에 재직 중이다. 보성군 조성면에서 태어났지만 초등학교 입학 이전 부모를 따라 상경했다.

▲보성(57) ▲연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시 24회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 ▲국무총리실장 ▲NH농협금융지주 회장 ▲금융위원장

광주발전연구원장 지낸 지방자치 전문가

박승주 안전처 장관

정통 내무관료 출신으로 지방자치와 행정 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신임 국무총리에 내정된 김병준 국민대 교수와는 참여정부 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참여정부 출범 직후 행정자치부를 떠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기획운영실장을 맡은 박 내정자는 참여정부의 개혁정책에 힘을 보탠 경력이 있다. 대인 관계가 원만하고 소탈하지만 업무에 철저하고 강단이 있다는 평도 받는다.부인 안선영(58)씨와의 사이에 1남1녀.

▲ 영광(64) ▲ 광주고. 서울대 경영학과·행정고시(21회) ▲ 내무부 자치제도과장 ▲ 행자부 제2건국운동지원팀장·월드컵지원국장·지방재정경제국장 ▲ 여성가족부 차관 ▲ 광주발전연구원 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세종로국정포럼 이사장

무안출발은 조이투어로~
비행기보다 오래 타는 버스는 이제 그만~!
이제부턴 무안에서 편안하게 떠나세요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Tel.(062)234-3222 Fax.(062)234-3141
NAVER 조이투어 검색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금환

추천1. 무안→일본(기타큐슈, 오사카/북해도) 직항 전세기
무안공항출발! 초특가 규슈여행 548,000원부터~
출발일 : 2016.12.16~2017.2.26/3박4일 ※설연휴 별도문의
[품격]기타큐슈 야마구치/미야지마 838,000~
[품격]남큐슈 미야자키/가고시마 998,000~

출발일 : 2017.1.27~2017.2.5/3박4일(단 4회) ※설연휴 별도문의
[품격]오사카/나라/교토/고베 1,168,000~
[고품격]오사카/교토/와카야마/시라하마 1,298,000~
[고품격]★오사카/북해도 설국의나라★ 1,498,000~
광주↔무안 왕복 버스 선착순 40명(2017년 1월 12일까지)

추천2. 무안→라오스 직항 전세기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가장 가고싶은 곳 1위!!
1,398,000원부터~
출발일 : 2016.12.28~2017.1.21/3박5일
[항공]비엔티엔/루앙프라방 1,498,000~
[항공]비엔티엔/방비엥/루앙프라방 1,548,000~

추천3. 무안→다낭 직항 전세기
출발일 : 2016.12.30~2017.2.24/3박5일
[관광]다낭/호이안/후에 1,149,000~
[골프]다낭 골프 54홀 1,649,000~
※공통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TAX, 전일정식사, 관광지입장료, 숙소, 여행자보험, 기사 및 가이드팁
※공통불포함사항 : 여권 및 개인비용(골프상품만 클럽 중식 불포함)

추천4. 무안→대만 직항 전세기
출발일 : 2016.12.7~2017.2.26/3박5일
[실속]타이페이/야류/화련/지우펀 699,000~
[품격]타이페이/야류/화련/지우펀 799,000~
[실속]타이중/야류/화련/지우펀 899,000~
[품격]타이중/야류/화련/지우펀 999,000~

<일본 전세기 특전>
스타플라이어항공 / 기종 : A320-200 / 좌석 : 150석
★한벌제품★ 한벌에비뉴 고급 여행가방 증정! (4인 가족 기준 1개 증정) ※실속 상품은 제외

★항공특가(항공권편도) 선착순 5명★
무안↔기타큐슈 : 편도 79,000원부터~
무안↔오사카 : 편도 98,000원부터~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동다 2003-1호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상품: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전지역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업체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비없음(단,기사/가이드봉사료,선택관광,각국 비자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
이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곳 조이투어